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1. 6. Vol. 1

■ 농정이슈

국회,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 인상, 5년 간 적용 가결

■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예산 및 기금안 13조 6,371억 원 확정

■ 연구지원

2014년 달라지는 제도

■ 특별기획(현장여론조사)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 제조관련 정책 제안

☞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국회,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 인상, 5년 간 적용 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2013.12.30일, **쌀 목표가격*** (현행) 80kg 당 17만83원 → **(개선)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 ※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 장치로 쌀 목표가격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으로 보전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가결

【개정안 주요내용】

-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쌀 목표가격 80kg 당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 인상**, 인상된 쌀 목표가격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적용**
 - ※ 협상 기간 동안 여야는 애초 17만4천83원 제시했다가 농민단체 반발로 17만9천686원 인상한 정부안과 19만5천901원 제시한 민주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 놓고 대립
 - 2014년 **쌀 고정직불금** (현행) 1ha당 80만 원 → (개정) **90만 원 인상, 2015년부터 100만 원 인상**
- **영농규모화 사업 중 농지매매, 농지교환 등에 적용하는 금리 2% → 1% 인하**
- **논 이모작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는**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 반영한 **1ha당 20만 원 → 40만 원 인상**

【농민단체-환영, 정부-당혹】

- **(농민단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인 반면, **(농식품부)** 주무부서인 농식품부 배제된 상황에서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목표가격 결정,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국회 결정에 당혹**

자료 : 한국일보(2013.12.30.) / 경향신문·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SBS(2013.12.31.) / 내일신문(2014.1.2.)

농정이슈

□ 식약처, GMO 표시기준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2.24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표시기준안(GMO 표시 통합고시) 행정 예고 **법률용어 ‘유전자변형’으로 통일**,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표시제도 개선 내용 배제**돼 비판 제기.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던 GMO식품, GMO농수산물, GMO생물체의 세부 표시기준 통합 제정·고시. 하지만 **문제됐던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제품에만 표시를 하도록 하는 표시 예외 대상 조항 그대로 존치**. ▲(경실련) 식약처의 GMO표시 통합고시, 표시제도 개선 없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무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 지방만 남고 DNA나 단백질을 뺀 상태의 식용유나 간장 등 다수의 GMO식품에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 **GMO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도상 허점**이 **기업들의 GMO사용 더욱 부추겨**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 지속될 전망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4.1.2.)

□ 농식품부, 전국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 농식품부, 2013.12.31일, **전국 134개 도축장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1월까지 실시한 도축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수준 평가결과, ▲**도축장 10곳 중 8개 가량은 위생수준 대체로 양호**…총 134개소 중 상등급 42개소(31%), 중등급 71개소(53%), 하등급 21개소(16%)로 **전체 도축장의 84% 가량이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 이는 **지난해 85%와 비슷한 수준**. ▲부류별…(소·돼지) 상등급 26개소(33%), 중등급 39개소(49%), 하등급 14개소(18%), (가금류) 상등급 16개소(29%), 중등급 32개소(58%), 하등급 7개소(13%)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2.31.)

□ 상수도 보급률 도농격차 여전

- 환경부, 2013.12.30.일, ‘2012 하수도 통계’ 발표, **2012년 말 현재 전국 상수도 보급률 98.1%, 특별·광역시 7곳 99.9%**로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 87.8%,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 62%대에 불과**해 **도시지역과의 격차 여전**. 국가의 지속적인

농정이슈

관심과 지원 필요. 또한 상수관망의 노후 등으로 인한 수도물 누수율 10.4%에 달해 유실되는 수도물의 양은 연간 6억2,600만, 5,100억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전국 1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평균 하수처리원가 816.1원/t의 40% 수준인 평균 326.3원/t 징수**해 **하수요금 현실화를 여전히 낮다**고 지적

자료 : 내일신문(2013.12.30.) / 농민신문(2014.1.1.)

□ 지리적 표시 신규 등록단체 포장재 제작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제*의 조기정착 위해 ‘**2013년도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단체**’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안성배, 진영단감, 서산팔봉산감자, 영광고추, 천안배, 고령감자 등 6개 단체, 각 단체 별 1,500만 원 씩 **총 9,000만 원** 지원. ▲**기대효과**…신규 등록단체에 소속된 생산농가의 참여의지를 높여 지리적표시제품 출하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 고품질 안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건강증진 기여. ▲**향후계획**…올해부터 ‘**찾아가는 지리적 특산물 발굴 서비스**’ 구축, **등록단체가 자발적으로 표시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지리적 표시제 확대 이유**…**한중 FTA 추진으로 국내 고유 브랜드 보호 필요성****

※ 농식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해당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1999년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해 2002년 보성녹차를 제1호로 등록한 이후 지금까지 136개 단체 등록·관리

※ 한·유럽연합(EU) FTA에서 우리나라는 EU 측 요구로 <보르도> <샴페인> 등 162개 품목을 지리적표시제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품목으로 받아들여 국내 업체들은 일반명사처럼 굳어진 <샴페인>조차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를 통해 우리의 고유 브랜드를 중국이 ‘짜퉁’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2.30.) / 농민신문·원예산업신문(2014.1.1.) / 한국농업신문(2013.1.2.)

농정이슈

2014년 달라지는 축산분야 정책·제도

구 분	지원내용	시행시기
축산업 허가제 전업농가도 시행	• 지난해 기업농에 이어 전업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허가제 시행 - (전업농가 가축사육규모) 소 50두, 돼지 1천 두, 닭 3만 수, 오리 5천 수 - (대상면적) 소 350㎡, 젖소 540㎡, 돼지 800㎡, 닭 1천380㎡, 오리 1천230㎡	' 14.2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	• 원유의 성분위생수준 가격체계도 소비자 기호변화 충족 위해 현재 유지방 함량중심에서 유단백질 기준을 새로이 신설시행 - (현행) 유지방, 체세포수, 세균수 기준 → (개선) 유단백질 추가	' 14.1월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 및 약물투여 금지	• 가축 출하 전에 절식, 약물투여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4.1.31일
닭오리 도축검사, 정부 검사관 수행	• 닭오리 도축업체 가운데 평균 일일 8만 마리 이상 도축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검사관이 검사. 이전 생산업체 소속 책임수의사 수행	' 14.7.1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명칭 변경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 (업무)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평가 업무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 등 추가	' 14.1.31일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도입	•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도입 - (현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농장도축업·집유업·축산물 가공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에 모두 도입되어 있으나, 유통단계별로 연계 없이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	' 14.1.31일

자료 : 축산신문(2013.12.31.)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14년 예산 및 기금안 13조 6,371억 원 확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1.)

개요

- 국회,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 13조 6,371억 원으로 확정
 -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 원 대비 1,027억 원 증액 조정, 이는 20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 증액된 규모
 - ※ 농식품부 국회 증감 추이(정부안 대비): ('09) △3,800억 원 감 → ('10) 304 증 → ('11) △448 감 → ('12) △23 감 → ('13) 16 증 → ('14) 1,027 증
 - 2013년 예산대비 1,103억 원(0.8%) 증가
 - ※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 규모 2,706억 원 고려할 경우, 2013년 대비 3,809억 원, 2.8% 증가한 효과

2014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구 분	2013예산 (A)	2014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 총사업비	135,268	136,371	1,103	0.8
□ 농업농촌	123,953	124,525	572	0.5
- 농업체질강화	30,673	31,056	382	1.2
- 농가소득경영안정	20,907	23,230	2,324	11.1
- 농촌개발복지증진	16,484	16,450	△34	△0.2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4,995	33,656	△1,339	△3.8
- 농업생산기반	20,894	20,133	△761	△3.6
□ 식품산업	7,339	7,726	387	5.3
□ 기타	3,975	4,120	145	3.6

-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조정
 - 쌀 목표가격과 현지 쌀값 감안하여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 원 감액
 - 대신 쌀고정·발농업직불,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서 3,058억 원 추가 증액

□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 내용

- **[쌀목표가격]** 변경 정부안(17만4,083원/80kg)에 대한 여야정 및 농업계의 이견 차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가마(80kg)당 18만8,000원 확정
- **[쌀변동직불금]** 감액 조정 대신 쌀 관련 추가 지원
 - (쌀고정직불금) ha당 지급단가를 9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860억 원 증액)
 -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 이모작) ha당 40만 원 지원
 - (쌀소비 활성화) 21억 원 지원 확대
- **[정책자금 중 후계 및 경영희생자금]** 금리 인하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3% → 2%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 3% → 1%
 - (농업경영희생자금) 3% → 1%
 - (농지(영농)규모화) 2% → 1%
- [자연재해 선제적 대비]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 추가 증액
 - (수리시설개보수) 4,800억 원(+ 300억 원)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600억 원(+ 50억 원)
 - (배수개선) 2,850억 원(+ 50억 원)
 - (수리시설유지관리) 1,565억 원(+ 26억 원)
- **[유통구조개선 대책]** 사업 확충 및 추가 증액
 - (농산물산지유통시설) 346억 원(+ 20억 원)
 - (노후화된 비축기지의 현대화 및 광역화) 161억 원(+ 77억 원)
-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 장날목욕탕 7개소(+7억 원) 추가 반영
- [귀농귀촌활성화 사업] 10억 원 증액
- **[FTA 폐업지원금]** 400억 원 증액
-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6억 원 확대
- **[축산물수급관리 예산]** 원유 가격연동제 시행에 따라 인상된 학교우유급식 지원 단가(50원/200ml 인상) 반영하여 113억 원 증액

Ⅱ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국회 증감액 현황 Ⅱ

단위: 백 만원

주요 증액사업(31개)	2014년		주요 감액사업(9개)	2014년	
	정부안	국회증액		정부안	국회감액
증액 소계	2,867,478	305,770	감액 소계	1,297,310	△203,050
국제농업협력(ODA)	13,008	1,100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11,600	△950
수리시설유지관리	153,909	2,600	재해대책비	290,000	△72,400
수리시설개보수	450,000	30,000	글로벌K-Food프로젝트	14,200	△50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55,000	5,000	농촌공동체활성화	2,046	△100
도시농업활성화	300	60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79,348	△600
농협사업구조 개편지원	169,150	8,1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	172,086	△500
배수개선	280,000	10,000	산지유통종합자금	590,000	△40,000
돌곶별경영체육성	2,000	500	해외농업개발	33,000	△3,000
서산A지역농업기반시설재정비	18,440	4,000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105,030	△85,000
금강2지구	30,000	5,000			
영산강4지구	28,000	2,000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10,000	2,000			
세계유기농엑스포		2,000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	6,300	1,800			
대형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증대	8,630	4,400			
고부가식품산업및컨설팅	4,317	1,000			
쌀소득보전고정직불	688,000	86,000			
발농업직불제(지자체)	84,934	45,300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	3,450	700			
귀농귀촌활성화	12,000	1,00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48,708	350			
쌀소비활성화	1,900	2,100			
비축기지현대화및광역화	8,438	7,720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2,574	2,000			
화옹지구	28,083	2,800			
영산강3-2지구	8,420	2,300			
새만금지구(내부개발)	263,500	20,000			
축산물수급관리	55,344	11,250			
폐업지원	62,717	40,000			
원예시설현대화	143,861	2,000			
종자산업기반구축	9,503	2,150			

농지법 시행령 개정·공포

☐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

- 농식품부,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방안’ 및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 방안’ 제도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공포(’ 13.12.30)
- 유휴농지 경작 활성화 위한 대리경작자 지정요건 완화
 - 일정한 결격사유* 없으면 누구나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귀농·귀촌인 등의 유휴농지 경작 목적 이용 촉진
 - ※ 휴경 등의 사유로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 받고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 등
- 불요불급한 농지전용 억제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 일부 축소
 - (감면대상 제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KT 전기통신설비 등
 - (감면비율 축소)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현행: 농업진흥지역 50, 비진흥지역 100 → 개정: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 사업용철도 간접시설(현행: 농업진흥지역 100, 비진흥지역 100 → 개정: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
-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 1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 허용
 - ※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 감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12.30.)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로 일원화

☐ 농식품부,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 개선

- 이원화되어 있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를 2014년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로 일원화

- (목적)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교역제도상 불균형 해소, 유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농’표시가 가능,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은 외국기관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판매
- 자율적 유기표시 근거가 되었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13.12.31일 종료됨에 따라 2014년부터 국내법에 따라 인증 받아야 국내시장에서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 표시해 유통·판매 가능
-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14.1.1일부터 시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12.31.)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 수립

☐ 기재부,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책비전과 과제 발표

-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14~’ 16년) 심의·의결
 - ※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산림청, 중기청 등 의견 수렴
 -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설한 협동조합 육성 → “2016년까지 취업자 5만 명 달성”
 - (추진 기제) ‘민간이 주도, 정부는 간접지원’ 원칙
- (시장진입) 기존 법인만을 상정한 법·제도로 발생한 차별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 확장
 -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인과의 M&A 허용*,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 확대
 - ※ 일반협동조합 + 영리법인 → 일반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정책브리핑

- **(자금조달)**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 적극 유도, 내부 및 외부 자금 활용 확대하는 기회 마련
 -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 홍보 강화, 협동조합연합회 공제기금 육성 유도, 지역신보 등에서 실시하는 협동조합 특례보증 및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이용 확대*
 - ※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익숙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차별 없는 자금조달 추진
- **(인력양성)** 현장전문가 육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역량 강화
 -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으로 기본교육 내실화, 중간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기업의 날’, ‘협동조합의 날’ 행사 통합 운영, 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 아이템 홍보의 장 마련 등
- **(연대·협력)** 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 제도, 설립·운영·해산 절차, 교육·홍보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 등재,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 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12.30.)

☞ 연구지원

2014년 달라지는 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12.27.)

구 분	지원내용 (현행) → (개선)	대 상	시행시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 → 맞춤형 급여 : 13만 명, 6.9조 원 → 152, 7.2	기초수급자	' 14.10월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	' 14.10월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소득하위70%, 기초급여액 1인당 월 10만 원 → 20 인상	장애인	' 14.하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 14.7월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	•가족가구의 근로장려금(ETC) 최대지급액 확대 : 70~200만 원 → 210	홀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자녀 있는 가구	' 14.1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 어린이집 96 → 121개, 지역아동센터 3,742 → 3,989개	아동	' 14.1월
	•대학생 국가 장학금 확대 : 1인당 장학금 수급액 연 22.5만 원 ~ 180 인상	대학생	' 14.1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 폐지 : 1회 5,000원 → 폐지	전국 만 12세 이하	' 14.1월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 신규, 대학 신입생 1인 당 연 450만 원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 14.1월
	• '사교육기 경감대책' 마련	전 국민	' 14.3월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 14.1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대·개편 : 지원대상 73만 가구 → 94, 임대료 8만 원 → 11	중위소득 43% 이하	' 14.10월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월세 소득공제율 50% → 60, 공제한도 300만 원 → 500	저소득층	' 14.1월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 허용 : (현행)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 등	' 14.1월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임대주택법 상 준공공 주택 10년 보유자	' 14.1월
의료비 부담 완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본인부담 2013~2016년간 연 60만 원 감감	해당 질병 환자 등	' 14년
	•의료비 본인상한제 세분화(3 → 7단계) : 본인부담 연 200~300만 원 → 연 120~250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14.1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개 당 본인부담 150~300만 원 → 75~150	75세 이상 노인	' 14.1월

연구지원

구 분	지원내용 (현행) → (개선)	대 상	시행시기
소상공인, 농어민 지원	•농어업인 재해보험연금보험 강화 : 재해보험 품목수 71개 → 77, 연금보험료 지원 연 최대 42.7만 원 → 45.9	농어업인	' 14.1월
	•스마트 전단지 앱 구축 등 ICT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 14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 7,500억 원 → 9,150	소상공인	' 14년
	•골목슈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 : 2,500개	소상공인	' 14년
	•소상공인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 : 연 2만 명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 14년
	• '지역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지역업자	' 14.6월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제도 추진 : 월 10만 원 → 최대 20 기초연금 지급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14.하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주택연금 공급확충 추진	주택연금 가입자	' 14.3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자	' 14.4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 위한 융자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 : 융자매출채권보험 13조 원 → 17, 신용보증투자 69 → 78	중소기업	' 14년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하는 성과보상 공제 제도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 14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 시 사업주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 14년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고용인원 인정비율 확대 :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0.5명 → 0.75	중소기업	' 14.1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 전환직원 1인 당 100만 원	중소기업	' 14.1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 청년 →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소기업 취업한 노인 및 장애인	' 14.1월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마련	전 국민	' 14.1월
국민편의 증진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마련	전 국민	' 14.3월
	•부동산 중개 등 지체관리 수수료 합리화방안 마련	전 국민	' 14.9월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 확대방안 마련 : 근로자복지시설 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숙사 등 → 사내병원 등 추가	근로자	' 14.4월

특별기획_현장여론조사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 제조관련 정책 제언

자료: KREI 리포트통신원을 이용한 동양분석실 자체 조사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3. 12. 7 ~ 12. 25
- 수집대상: KREI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접수건수: 24건
- 주요내용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 제조 관련 정책 제언>

- 저장성, 부가가치 향상 등 가공으로 농산물 한계적 특성 극복할 수 있어
- 소규모 농가 농산물 가공산업 진출에 한계
- 여러 농가 중복되는 가공품으로 오히려 경쟁력 낮아지기도
- 가공교육 및 자격심사, 경제심사 등 거쳐 가공산업 지원토록
- 고유 전통식품 제조에 지원 강화하고 계승해 나가야

<기타 농촌현장 여론>

- 창고시설 없어 농기계 노상 방치해
- 현 가축퇴비 지원제도는 대농에 유리해 개선 필요
- 굴삭기, 지게차 등 농기계 운용 면허취득 지원 요망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 제조 관련 정책 제언

- **저장성, 부가가치 향상 등 가공으로 농산물 한계적 특성 극복할 수 있어**
 - 농산물은 식품의 원료로서 낮은 저장성, 시간적 제약, 생산지역의 제약, 생산량과 품질의 불균일, 많은 부피와 무게, 수요와 공급의 가격 비 탄력성 등 특징이 있음. 가공을 거치면 높은 저장성의 확보, 건조와 포장 등 안전성 확보, 시간적 제약의 극복, 특정지역 생산제약 극복, 불균일한 품질개선,

㉔ 특별기획_현장여론조사

부피·무게 감소, 다양성과 기호성 향상, 영양성 향상, 편의성 향상, 부가 가치 향상 등 한계적인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어 농산물 가공은 필수산업임.<강원 강릉, 송인숙>

○ 소규모 농가 농산물 가공산업 진출에 한계

- 함양지역은 농산물 가공 및 전통식품 제조업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됨. 소비자는 현대식 시설에서 제조된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의 노후된 업체는 가공산업 진출이 어려움.<경남 함양, 박태우>
- 농산물 가공시설 및 포장, 유통 등은 자본이 없는 개인농가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많음. 마을단위 공동 작업장이나 가공조합법을 설립해 힘을 모아 추진하는 방안이 이상적일 것임.<전북 전주, 박향숙>
- 가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가공시설, 유통능력이 고루 갖춰져야 하며 특히, 규제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화시설 등 소규모 농가가 버거운 부분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함.<제주 서귀포, 김상우>

○ 농산물 가공에 식품위생법 규제기준 완화 요망

- 제도가공업은 법률상 폐수배출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채소나 과일, 곡류를 씻은 물은 오염도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 기준을 적용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함. 농산물 가공식품의 종류와 시설 규모, 폐수 종류, 오염 정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임.<경기 안성, 임충빈>
-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농산물 채취업에만 해당되어서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나, 가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영업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농가 모두가 인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무엇보다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임.<강원 강릉, 송인숙>
- 청국장이나 된장 등 조금이라도 농산물 가공해 소량 판매로 이어진다면 부가 수입원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나 식품위생법 규제 아래 가공은 엄두도 내지 못함. 소득보전과 농산물 재고해결 차원에서 직접 생산한 안전농산물에 대해서는 일정량을 가공해 판매가능 하도록 하면 좋겠음.<경기 안성, 이길숙>

㉔ 특별기획_현장여론조사

○ 여러 농가 중복되는 가공품으로 오히려 경쟁력 낮아지기도

- 이제는 농산물도 생산만해서는 소득을 올릴 수 없어 생산만큼이나 농산물 가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가공산업도 유행 따라 가뭇 잘되는 농가 따라 한 품목에 집중되어 오히려 가공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이 가공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음. 선노농과 비교해 차별적인 가공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임.<충남 청양, 장석우>
- 너나 할 것 없이 중복되는 품목 때문에 오히려 동종 산업의 판로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 구체적인 판매계획을 세우고, 가공산업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거친 농가를 엄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강원 영월, 유영조>
- 정부지원이 집중되어 무모한 가공산업에 뛰어드는 일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제대로 될 확률은 낮음. 전국적으로 동일 농산물로 동일 가공품을 만들고 있는 경우도 많아 새로운 상품개발이 시급함.<경북 상주, 김인남>

○ 가공교육 및 자격심사, 경제심사 등 거쳐 가공산업 지원토록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철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농업인이 아닌 사람 몇몇이 참여해 취득한 자격증을 갖고 개인사업처럼 운영하는 곳이 더러 있음. 따라서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가공은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만 자격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함.<강원 홍천, 변해동>
- 식품위생사 등 자격시험제도 강화로, 자격증을 갖추도록 소규모 가공업 교육을 시행하고 전통방식의 가내 가공업에 대해서는 가공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함.<강원 강릉, 송인숙>
- 우리 면 지역에서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으로 한과 가공시설을 지었음. 떡이나 엿 등 일반 전통가공식품은 1년 열 두달을 고루 판매할 수 있는데, 한과는 매년 설 명절 때만 가공되고 내내 휴업하는 실정임. 가공시설 지원에 앞서서 경제적 심사가 필요할 것임.<전남 화순, 나중주>

○ 고유 전통식품 제조에 지원 강화하고 계승해 나가야

- 농촌의 일손부족과 식품 다양화로 인해 점차 우리 식탁에서 전통식품은 몇 가지 찾아보기 어려움. 된장, 청국장 등 각종 장류와 전통주, 기타 전통음식 등을 만드는 전통식품 제조 장인을 지원하고 육성해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임.<충남 부여, 최영호>

㉔ 특별기획_현장여론조사

- 우리나라 된장은 우리 콩을 판매한 실적과 제조시설만 갖추면 전통된장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대형마트를 가보면 농식품인증 전통식품 마크가 붙은 된장의 90%이상이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어 공장산 된장이 전통된장이라 인정받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통기법으로 만든 소규모 가공업체는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임.<경북 고령, 최대봉>
- 전통식품 제조 기술은 세계적인 유산이며 후세대 이어나갈 자산임. 지방마다 내려온 전통 맛을 발굴해 전통식품 제조기술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임.<강원 평택, 연규석>

㉕ 기타 농촌현장 여론

○ 창고시설 없어 농기계 노상 방치

- 농사일에도 힘이 드는데 농기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음. 적당한 보관시설이 없으므로 농기계는 공터에 방치하는 실정임. 겨울철 간이 보관시설을 지원해 주면 좋겠음.<제주 서귀포, 김상우>

○ 현 가축퇴비 지원제도는 대농에 유리해 개선 필요

- 내년부터는 농사용으로 쓰는 포대 가축퇴비를 면사무소에 최고 300포까지 신청해서 개인별 농지면적에 따라 배정한다고 함. 농지면적 대비 배정이라면, 영세 소농가는 턱없이 적게 배정되어 필요한 양을 비싸게 구입해 사용해야 될 상황임. 대농에만 유리하게 적용하지 말고, 영세농에 최소 30~50포는 공급해 주어야 할 것임.<전남 화순, 나종주>

○ 굴삭기, 지게차 등 농기계 운용 면허취득 지원 요망

- 농촌에서는 대부분 지게차와 굴삭기를 갖고 운용하는데, 대개 무면허인 사람이 많음. 농한기를 이용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굴삭기나 지게차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취득을 지원하면 좋겠음.<대구 달성, 광동준>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